



# 주간 통일정세

2009-1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량강도 삼지연지구 시찰(3/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량강도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청봉숙영지'에 새로 건립한 고(故) 김일성 주석 동상과 여러 곳을 둘러보는 동시에 삼지연에 새로 건설한 답사숙영소와 문화후생시설들도 살펴본 후 "혁명전적지 건설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삼지연지구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사적이 집중돼 있는 혁명의 성지이며 혁명전통 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김경호 노동당 량강도위원회 책임비서,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리제강 리재일,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 등이 수행

#### 나. 정치 관련

##### ●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진행(3/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각지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후 2시 현재 93.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통신은 중앙선거위원회의 보도를 인용, "14시 현재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3.1%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연로하거나 병으로 선거장에 나갈 수 없는 선거자들은 이동투표함에 투표하고 있다"고 보도
- \* 남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오전 9시에 시작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대의원 숫자는 지난 2003년 제11기 대의원의 경우 인구 3만 명 당 대의원 1명 원칙에 따라 총 687명을 선출했음.

##### ● 통일신보, 김정일 선거구 우상화 선전(3/7, 통일신보; 3/8,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한 제333선거구가 "만사성공의 길수"인 3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선거가 3년 뒤 "강성







이번 회령 방문이 “결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김정일이 1970년대 함경북도 온성군의 왕재산혁명사적지 기념탑과 박물관 건설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할 때도 회령역에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토록 했다고 신문은 설명

● **北, 0.001mm라도 침범하면 천백배 보복(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무분별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뽐내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 **북한, 한국정부대표 인권발언에 강력 반발(3/3, 연합)**

- 북한은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측에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
-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
- 최 참사는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복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 **北, 클린턴엔 침묵,李대통령만 비난(3/3,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언론매체들은 3일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간 면담과 관련, 이 대통령이 한미 간 ‘혈맹관계’와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포기’를 강조한 사실만 집중비난하고 클린턴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대조적인 보도



- 노동신문은 3일 ‘사대매국노들의 추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월19일 방한했던 클린턴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양국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라며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범죄적 계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도 3일 ‘민족의 존엄에 먹칠하는 너절한 추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 국무장관에게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한 것”이라며 “외세와 공모하여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
- 그러나 두신문은 클린턴 장관의 후계구도 문제 등 대북 발언에 대해선 침묵

#### ● 北, 미국서 ‘北 핵보유국’ 인정 주장(3/3,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3일 미국과 영국의 “출판보도물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미 행정부가 조선의 핵무장 해제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해야 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
- 이들 매체는 미국의 AP통신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미 행정부 내에서 우리나라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해 소개”하면서 “얼마 전 미 국가정보국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전쟁목적이 아니라 전쟁억제 수단’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고 주장
- 또 로이터 통신을 인용,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또다시 규정”하고 특히 “조선을 중국, 러시아와 나란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다”고 주장하고 “미 정부는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 들어 정보 및 국방 관련 기관들과 인물들이 연이어 조선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 ● 김정일이 민족단합의 유일중심(3/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일 ‘조국통일의 기본 담보는 민족 대단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족단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연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민족단합의 유일한 중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
- 방송은 “단합된 민족의 힘의 위력은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를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 대해 김 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가 말한 “민족대단결 방침”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



#### 다. 경제 관련

##### ● 두만강개발계획 논의, 남북 등 5개국 참여(3/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10차 광두만개발(GTI.Great Tumen Initiative)회의를 24, 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UNDP의 두만강개발사무국 주수 대변인이 RFA와 인터뷰에서 밝힘. 2007년 11월 러시아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 첫날엔 25명으로 구성된 경영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이튿날엔 투자설명회가 예정
- GTI는 두만강 인근 지역인 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옌지, 러시아의 나홋카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5년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UNDP와 참여국들은 2007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대상지역 범위를 한국의 동해안과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포함토록 광역화하고 이름도 현재의 ‘광두만개발’로 변경하였음.
- 이 사업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재화를 북한의 항구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라진과 선봉 등 북한의 동북지역 항구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 北기술자들,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 연수(3/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에너지기술단이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하며 풍력 에너지를 비롯해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배운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스위스 비정부기구(NGO)로 북한에 풍력 발전기를 시범설치해준 캠퍼스 파워 크리스투스(Campus Power Christus)의 부르크하르트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독일의 후쭌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대학, 기업체, 풍력 발전소, 전문 기술학교 등을 방문해 유럽의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연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 기술대표단은 연수에서 풍력 에너지 뿐 아니라 태양 에너지, 수력, 바이오가스 등 폭넓은 분야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울 예정
- 캠퍼스 파워 크리스투스는 이미 북한의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했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현재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대를 더 설치 중임.
- 이 단체는 북한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 많아 풍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고 오는 2020년까지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노동신문, 영농준비 완료(3/2, 노동신문)**
  -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이모작을 위한 앞그루(전작) 밀.보리 파종을 이미 시작한 가운데 북한 전역에서 올해 농사 준비가 끝났다고 노동신문이 소개
  
- **유럽기업들, 원가 낮추려 대북투자 관심 증대(3/4,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사업과 투자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제품 원가 절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럽 기업들의 대북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큰 특수를 맞을 전망이다라고 네덜란드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가 주장
  -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의 북한 방문을 조직해온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치아 대표는 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 기업들은 특히 값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의류와 농산물 산업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
  - 그는 휴대전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도 유럽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방북한 유럽 사업단이 이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확대했다”고 언급
  
- **北, 일반인 휴대전화 허용, 6천500명 돌파(3/3, 동방(東方)위성TV)**
  - 북한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미 6천500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상하이의 동방(東方)위성TV는 3일 보도
  - 동방위성TV는 2일 평양 시내의 한 휴대전화 전문매장에서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는 기현상을 연출했다고 보도, 일부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곧바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각종 기능을 연구하면서 기쁨을 만끽했다고 소개
  -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일반인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우리들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은 2008년 12월 북한에서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당시에는 일부 특권계층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음. 그러나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북한은 지난 2002년 11월 유럽 방식의 GSM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나 2004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통과한 용천역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휴대전화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음.





## 라. 군사 관련

### ● 北, 키 리졸브 기간 남북 군통신 차단(3/9)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한미간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기간에 “북남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 온 마지막 통로인 군통신을 3월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들 군사연습 기간에 “개방되어있는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성명은 특히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요격행위에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해 즉각 대응타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명성 2호에 대해 요격할 경우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 뿐 아니라” 미·일과 남한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민주조선, 2008 국방백서 비난(3/7,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7일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기도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라며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북침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려 놓고 있다”고 주장

### ● 北, 키리졸브 철회여부로 오바마행정부 판단(3/6,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북측 단장인 곽철희 인민군 소장은 3월2일 회담에서도 이들 군사연습 계획에 대해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새 미 행정부의 약속이 기만적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이 회담을 “조미(북미)장령급 회담”이라고, 유엔사측을 “미군 측”이라고 각각 부름으로써 남한 배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6년여만에 유엔사와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제안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통미봉남’ 과시에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대결노선 분쇄가 목적(3/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대결구도의 원흉 - 북남합의 백지화한 남측 당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1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은 남한의 대북 “대결노선을 짓부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그러나 민족사의 시계비늘을 되돌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6.15, 10.4에 수표(서명)한 최고사령관(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군대로서 본분”이라고 언급
- 신문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은 총참모부 성명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말하고, 조평통의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들의 무효화 선언은 “북남합의를 (북한이) 솔선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남한 정부의 “대북 대결노선에 의해 합의가 사문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정식으로 확인했을 따름”이라고 주장
- 신문은 조평통을 “북남관계 문제에서 나라를 공식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설명

● **北-유엔사 장성급회담 종료, 이견 팽팽(3/6, 연합뉴스)**

-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제16차 장성급회담이 6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16차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오전 10시46분께 종료
- 유엔사 측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동해상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 그러나 북측은 지난 2일 열린 제15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3월 9~20일 열리는 키 리졸브 연합연습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 유엔사측의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사가 제의하고 북측이 수용해 열린 6일 장성급회담에는 유엔사측에서 조니 와이더 미국 공군소장, 이창현 공군준장, 매튜 오해런 영국군 준장, 해롤드 각번 뉴질랜드 대령 등이, 북한 측에서는 곽철희 소장(한국의 준장급) 등 4명이 참석

● **조평통, 南항공기 안전 담보 못해(3/5, 조평통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5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실시(9~20일)를 비난하며 “우리는 군사연습 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괴뢰 도당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한 국적기는 16편(미주 12편·러시아 4편)”이라며 “한 편당 685유로(약 135만원)의 통과료를 북한에 지불했다”고 밝힘.
- **北-유엔사, 판문점서 영관급 접촉(3/5, 연합)**
  -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5일 판문점에서 영관급 회의를 열어 제16차 장성급회담을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유엔사가 발표
  - 유엔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유엔사와 북측간 영관급회담을 열어 6일 오전 판문점에서 제16차 장성급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장성급회담 의제와 행정적인 의전절차를 조율했다”고 밝힘. 유엔사는 앞서 3월 2일 제15차 회담에서 북측에 회담을 제안했고 북측이 이 제안을 수용해 회담이 성사되었음.
  - 북측은 이날 영관급 회담에서도 3월 9~20일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며 6일 열리는 장성급회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보고서, 北, 2006년에 대포동2호 20기 생산**
  -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06년까지 모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
  - CRS가 최근 업데이트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일부에선 북한이 2005년 처음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초기생산을 시작했고, 2006년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北, ‘키 리졸브’에 전투동원태세 갖춰(3/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3일 ‘북침전쟁 도발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 제목의 논평에서 3월9일 시작되는 한미합동 ‘키 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연습을 “전쟁도발 책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이에 대응해 “전투동원태세”를 갖췄다고 언급
  - 신문은 “첨단 군사장비와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을 “엄중시”한다며, 이번 군사연습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주장



- **北, 유엔특위서 유엔사 해체 주장(3/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북한 대표는 2월 24일에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 정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유엔으로부터 그 어떤 지시도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유엔의 통제 밖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남한에 존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미군사령부이고 ‘유엔군’이라는 것도 미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 그는 이어 “미국이 이러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고 유엔의 이름을 빌려 미군의 침략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조속히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마. 사회·문화 관련

- **北박현숙, IWF 여자역도 10대선수 선정(3/7, 조선중앙통신)**
  -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 금메달리스트인 북한 박현숙이 국제역도연맹(IWF)의 2008년 여자역도 10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압록강체육단 소속인 박현숙은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 경기에서 인상 106kg, 용상 135kg을 들어 합계 241kg으로 금메달을 획득
- **노동신문, 여성역할에서도 ‘군사先行’ 강조(3/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세계여성의 날(8일)’을 맞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오늘 우리 여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며 “모든 여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여성역할의 제고를 강조
  - 신문은 ‘대고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성들은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밀고나가야 한다”며 “인민군대를 친혈육으로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해 우리의 군민 대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고 자식들을 잘 키워 조국 보위초소에 적극 내세우고 가정을 혁명화하여 선군시대에 혁명적 군인가정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문
  - 또한 “여성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찾아 해야 한다”며 “혁명적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 배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풍을 세우는 데서도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 **北, 봄철위생에 옷차림, 머리단장도 중요(3/1, 노동신문)**

  - 북한에서 3~4월 '봄철 위생 월간'을 맞아 집과 직장, 도시를 보수·정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개선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
  - 신문은 1일 '봄철 위생월간'의 시작을 알리며 봄에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건군절(4.25) 등을 맞게 된다고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번 봄철 위생월간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 사업을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 정신이 번쩍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문
  - 신문은 또 동, 인민반, 가정들에선 "자기 마을, 자기 가정을 위생 문화적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봄의 계절적 특성에 맞는 옷차림과 머리 단장, 몸 단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 **北 엘리트체육 산실, 국가종합체육단 50돌(3/3, 조선신보)**

  - 북한 엘리트 체육의 최고봉인 '국가종합체육단'이 올해 창립 50돌을 맞았다고 조선신보가 3일 소개
  - 국가종합체육단은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와 후방사업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9년 2월 27일 세워졌으며 창립 당시엔 축구, 육상, 체조 등 7개 종목의 선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농구, 배구, 탁구, 소프트볼, 수중발레, 속도빙상(스피드 스케이팅), 자전거, 배드민턴 등 30여개 종목으로 늘어났음. 체육단은 현대적인 숙소와 식당, 훈련장을 갖췄으며, 평양 시내에 동계훈련소, 마라톤훈련소, 해양훈련소, 종합산중훈련소 등도 꾸려져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체육단이 "나라의 체육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1971년 11월 현지지도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신문은 보도
  - 지난 50년간 체육단에 속한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대회에 1천470여회 참가해 금메달 1천443개, 은메달 1천310개, 동메달 1천633개 등 총 4천38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식수절'에 대대적인 나무심기(3/2,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에서 2일 남한의 식목일 격인 '식수절'을 맞아 각 도, 시, 군에서 식수 활동과 쫓기모임이 개최됨.
  - 조선중앙TV는 2일 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이 평양 용악산 혁명사적비 앞 교양마당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



계부문 일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원들의 꺾기모임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중앙과 지방의 여맹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식수절을 맞아 ‘부강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오늘의 현실은 산림조성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식수도 “강성대국의 대문 열기 위한 총공격전”의 하나라며 전국적으로 나무심기를 촉구

\* 북한의 식수절은 원래 우리의 식목일(4.5)과 비슷한 날인 4월6일이었지만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1946년 3월2일 평양 모란봉에 올라 산림조성 구상을 제시한 것을 기념해 1999년부터 3월2일로 앞당겨 졌음.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 보즈워스, 北과 대화 희망·노력 중(3/7,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 “당장은 아니지만 북측과 접촉하고 싶다”면서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노력중”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측과 접촉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북한이 인공 위성이라고 하든 미사일이라고 하든 발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즉답을 피함.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한국 민항기 위협’ 발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
- 또 그는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너무 이르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7일 오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오찬을 겸해 회동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

#### ● 美국무부, 北, 민항기 위협 용납 불가(3/7, 연합)

- 미국 국무부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6일 북한이 동해상을 통과하



는 한국 국적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국제 민간항공과 전 세계적인 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인 레토릭은 보다 더 건설적인 개입정책을 펴려는 목표에 비추어 부당하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언급, 또 미국 정부가 미국적 민항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렇지 않다”고 답변

### ● 북, 한미동맹 파기해야 핵포기, 핵물질-핵무기 ‘분리 폐기’ 주장(3/6, 동아일보)

- 북한이 2월 3~7일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일행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했던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 싱크탱크 닉슨센터가 발행하는 저널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만난 결과를 이같이 전언
- 그는 “김 부상 등 북측 관리들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파기를 제시했다”고 밝힘.
- 북한은 또 핵 폐기 과정을 기존 3단계가 아닌 4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힘.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사실상 합의된 ‘핵시설 폐쇄 → 불능화 → 폐기’라는 3단계 외에 ‘핵무기 제거’라는 별도의 4단계를 제시하며 사실상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임.
-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북측은 ‘무기들(weapons)을 제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며 비핵화를 단계별로 진행하기를 희망했다”며 “북측은 이에 앞선 3단계에선 경수로를 제공받은 뒤에야 플루토늄 시설 등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고 전언
-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핵무기 포기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며 “6자회담이 열리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열려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고 언급

### ● 北, 인권 지적 美에 반박(3/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미국 국무부가 2월 하순 발표한 ‘2008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독하게” 나쁘다고 평가한 가운데 노동신문은 4일 미국을 “인권유린의 선수권 보유자”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인권유린의 선수권 보유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걸고들 때면 그 무슨 인권문제를 약국의 감



초처럼 꺼내들곤” 하지만 “미국으로 말하면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처지에 있지 못한 나라”라며 관타나모 수용소 사례 등을 들어 역공

● **北 위성발사시 유엔제재 불가피(3/2,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의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반도에서 이 시기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아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그들이 결의안을 위반하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나. 북·중 관계

● **中, 北미사일 우려 간접 표명(3/7, 연합)**

- 중국의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
- 양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언급, 그는 북한의 발표 내용을 ‘통신위성 발사 실험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우리는 이 발표에 주목하고 있으며 각국 반응과 사태 추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이어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을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6자회담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9.19 공동성명에 근거해 각국이 공동 노력해 제2단계 행동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제3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결정서 조인(3/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은 2월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0차 회의를 열어 결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조인식에는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북측 이사장인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과 중국 서인표 국가전력망공사 부총경리가 참석, 서명
-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인 압록강의 수자원을 공동 이용한다는 취지로 지난 55년 4월 조·중수력발전이사회를 설립, 매년 평양과 베





이장에서 번갈아 회의를 열어 수풍, 운봉, 위원, 태평만 등 4개 발전소의 운영문제 전반을 논의

#### 다. 북·러 관계

##### ● 러 외무, 北 로켓발사 움직임 주시(3/2, 연합)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 준수를 촉구,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은 별개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 알아야 한다”고 언급
-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준수를 기대한다”고 강조
- 그는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6자회담을 되도록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담 참가국들이 “양자회담에 중요한 이슈를 (6자회담의) 의무이행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라. 북·일 관계

##### ● 총련 일꾼 대표단 방북(3/6, 조선중앙통신)

- 홍인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일꾼 대표단이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하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 日, 北 미사일 발사시 제재 강화(3/5,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 신문은 외무성 한 간부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사가 이뤄지면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
- 또 북한과 일본이 2008년 8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대북제재 해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 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양측 간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 北, 과거청산이 북일관계 정상화 선결조건(3/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과거청산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과거청산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





### ● 北, 아랍 국가들과 잇단 교류(3/2, 조선중앙통신)

- 평양의 천리마문화회관에서 2일 쿠웨이트의 국경절(2.25) 48주년과 독립기념 18주년에 즈음해 쿠웨이트의 역사와 문화, 생활 풍습을 소개하는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조선쿠웨이트친선협회’ 위원장인 백용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또 방북중인 후세인 하리디 이집트 외교 차관이 이날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통신은 보도, 2월27일에 방북한 이집트 외교부 대표단은 2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도 면담
-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3. 대남정세

### ● 평양 남북경협 임가공업체 10곳 체불(3/7, 연합)

- 평양에서 의류 등 임가공을 하는 남북경협 업체 약 100곳 중 10곳 이상이 세계적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긴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일부는 부도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2월28일에서 3월4일까지 방북했던 김정태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장은 평양에 있는 섬유부문 임가공 경협업체들을 총괄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련) 산하 새별총회사의 리명준 총사장으로 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힘.
- 이들 임가공 업체들은 1월초만 해도 정상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격히 상황이 악화된 것은 경기침체의 심화에 따른 자금부족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분석,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북한의 새별총회사측에 북한이 지난 4년간 20-30%씩 올린 임가공료의 인상을 자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새별총회사측은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전언
- 안동대마방직의 회장이기도 한 김 회장은 안동대마방직과 새별총회사 및 북한 경공업성간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도 2008년 10월말 준공한 평양대마방직의 경우도 당초 3월 정상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자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5개월째 중단 상태”라고 언급
- 김 회장은 그러나 안동대마방직이 역시 북한 측과 합영으로 “트럭 40대를 투입한 북한내 물류사업은 중국 단둥-신의주-평양 사이 구간에서 3월 16일 개시할 예정”이라며 “평양 임가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 현재 20일정도 걸리는 물류 기간을 이틀로 획기



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주장

- 한편 지난 3일 북한의 김성일 민경련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태 회장이 남북 경협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남북대결 구도의 종식을 위해 인도적 사안 등에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김성일 부회장은 “남측이 대결구도를 안 풀면 YS(김영삼 대통령) 때처럼 (남북간에) 한번도 마주 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 北, 개성기업에 ‘근로기준’ 통보(3/4, 연합)

- 북한이 임금체불시 제재규정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노동세칙’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4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연말,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천 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측에 통보했음.
- 노동세칙은 북한 법령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시행령 성격으로, 작년까지 남-북간에 세부 조문을 둘러싼 협의가 계속돼 왔음.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공단 관리위 측과 협의해오던 ‘노동세칙’을 2008년 말 통보해왔다”고 확인하고 “아직 임금체불로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북측이 근로조건을 일방 통보해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노사협’ 과정에서 북한 당국을 직접 상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강원도, 북측과 교류협력사업 재개 합의(3/3, 연합)

-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도의 실무자들이 지난 달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평양과 금강산에서 만나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등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송어양식장(3천300㎡)을 북측 강원도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변에 오는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남측은 설계와 자재 제공, 북측은 인력과 시공을 맡기로 했음.
- 또 안변 남대천변에 2003년 12월과 2008년 5월 각각 준공한 연어 부화장과 양어사료장은 북측의 내수면 어업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금강산 인근인 삼일포와 금천리 협동농장의 10ha 논과 밭을 공동 경작하고 1천마리 규모의 돼지를 기르는 양돈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여기에 더해 2001년 시작된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남북 환경교류의 모범사례로,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이번 합의를 위해 강원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 등 실무자 3명이 2월 18-21일 평양과 금강산을 방문, 민족화해협의회 및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갖고 합의서를 교환

- **南한총련-北조선학생위 공동결의문 발표(3/2,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제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북한의 조선학생 위원회가 3.1절 90주년을 맞아 ‘공동결의문’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미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두 학생 단체는 1일자 결의문에서 특히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북남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을 비난



■ 별첨1: “北, 핵보유국으로서 북미대화 원해” (2/9,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7일 평양을 방문했던 모든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방북했던 미국 민간 전문가 6명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한 국내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에 따르면 미국 방북단은 북한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수차례 만났으며 김 부상은 방북단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상은 또 방북단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직접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방북단의 한 일원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장관, 윤영관 서울대 교수, 정중욱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단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앞서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핵무기는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며 검증은 비핵화 3단계(핵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왔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언급, “핵무기가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고 검증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 별첨2: North Korean Latitude

by Morton Abramowitz

02.26.2009

The North Korean legacy left by the Bush administration to President Obama reminds one of the baseball manager's rant to his centerfielder's incessant errors: "You screwed up that position so badly no one will ever be able to play it again."

Bush's minions came to power determined to destroy the Agreed Framework, the Clinton-era agreement designed to end the North's production of plutonium and ultimately to prevent the use of existing stocks for building weapons. In return, North Korea was to receive two light-water nuclear reactors and heavy fuel oil to relieve immediate energy shortages, as well as a gradual normalization of relations. Pyongyang at one point even agreed to a missile-test moratorium and proposed an end to the production and export of medium- and long-range missiles. Besides, the North had and still has an effective conventional deterrent—the ability to quickly destroy Seoul with massive artillery which makes American bombing of North Korean facilities extremely difficult, whatever our bombast.

Mr. Bush's preference for "regime change" over diplomacy scrapped the Agreed Framework and resulted in North Korea's production of more plutonium,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a weapons test. In its twilight years, the Bush administration resigned itself to negotiations in the six-party forum, buying off parts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s capabilities—reverting to Clinton's strategy, but no longer labeling it as "rewarding bad behavior." The biggest difference now is that we're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When our private delegation visited Pyongyang in early February, senior North Korea officials, including their top six-party negotiator, gave us their version of what needs to be done.

They want to resume negotiations and proceed step-by-step toward denuclearization. Getting rid of what they called their "weapons" would be the last step. They want first to conclude phase two of the six-party agreement by disabling their plutonium-production capabilities, which is currently held-up by



the absence of promised fuel oil and a dispute over the possibility of verification. They would then proceed to the agreements' third phase and dismantle their plutonium structure, but only if we gave them light-water reactors.

The North would give up their nukes under variously expressed conditions related to ending American hostility, removing the U.S. nuclear umbrella or ending our alliance with the South?perhaps all these things. In short, denuclearization?or getting back to where we were supposedly moving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office?is at best a long way off. Whether this is their bottom line remains to be seen.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the unenviable choice of continuing the six-party negotiating process, finding a faster formula f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or benignly neglecting Pyongyang until it becomes more accommodating. Quick-fix rhetoric is not likely to entice Pyongyang to abandon its weapons. How long is the United States prepared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at possibly contributes to proliferatio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remains dim in trying to deal with this opaque, often mendacious, regime. The best solution is indeed regime change, but we do not really know how to do that with anything approximating an acceptable level of risk. A broader policy including long-term engagement?like the one advanced for a decade by South Korean leaders?produced little change in the North. An international version of this approach would face fierce opposition in Washington, continuing already present disagreements with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benign neglect might be appropriate, but it inevitably leads to Northern provocations, fears of war and a return to talks. We can put down a serious proposal to try to secure its nuclear weapons, but it is hard to see North Korea ready to give them up anytime soon. That means we are most likely, as Secretary Clinton indicated during her Asian trip,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and at least seek to prevent the North from accumulating more plutonium.

If we proceed incrementally, as the six powers agreed to in 2007, we need to stiffen safeguards against proliferation and reassure Japan and South Korea about our deterrent capability, lest domestic political forces compel them to develop nuclear





weapons. At a minimum, we will need close strategic consultations on this score not only with Tokyo and Seoul, but also Beijing. The North's vitriol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pparent intention to test-fire a long-range missile?which could halt negotiations for an uncertain period?has worsened the diplomatic atmosphere.

In resuming negotiations we need to remember that North Korea is a pitifully weak state with a large but somewhat archaic military apparatus. The country is isolated, has no allies and may well face a turbulent political transition. In devising policy we should not forget?which we usually do?the depressing fact that the North has an enormous humanitarian problem, with much of its people in deep distress and little prospect for improvement.

Fashioning a Korean policy is hard. Aside from the difficulty of keeping our friends and allies singing from the same sheet, Washington has been polarized not only over policy, but also over the facts. The level of discourse can be venomous. Developing a coherent, sustainabl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would be a great achievement. Actually implementing that strategy would be heroic, hopefully without a bad centerfielder.

\* Morton Abramowitz, a senior fellow at the Century Foundation, was former president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보즈워스 “中도 北미사일 반대”(3/4)

- 중국을 방문 중인 보즈워스 특사는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양제츠 외교부장과 면담한 뒤 이날 베이징 웨스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미국과 중국)는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입장을 전함.
-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며 조만간 그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그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해결하는데 다자협의체인 6자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 “北 2006년에 대포동2호 20기 생산”(3/4)

-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06년까지 모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
-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1기를 발사 실험에 사용했지만 2007년 이후 추가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최소한 20기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낳음.
- CRS가 최근 업데이트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일부에선 북한이 2005년 처음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초기생산을 시작했고, 2006년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작년 4월 영국의 세계적인 군사컨설팅업체인 제인스그룹이 발간한 ‘제인스 국가별 안보평가 보고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 북한은 스킨드형 단거리미사일 600-800기, 노동 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150-200기, 기타 50기의 장거리 미사일 등 1천여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
- CRS보고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에 대해 길이 35m의 2단계 미사일로 700~1천kg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사거리가 3천750km이지만 3단계 로켓이 추가될 경우 사거리를 6천700km까지 늘릴 수 있



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보고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탄두를 200~300kg으로 줄여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하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될 수도 있음을 우려함. CRS보고서는 북한이 옛 소련의 R-27 미사일을 토대로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천5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또는 배치중이라며 ‘해상발사용 미사일’은 이동이 자유로워 탐지가 어려운 데다가 사거리 제약을 상당 정도 극복할 수 있어 지상발사용인 대포동 2호보다도 미국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이 아직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상발사용 미사일의 위협에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다고 덧붙임.

### ● 성 김 “中과 6자회담.미사일 모두 협의”(3/3)

- 북핵 6자회담의 성 김 신임 미국측 수석대표는 3일 북핵 6자회담 진전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문제를 두루 협의하기 위해 방중했다고 밝힘. 이날 오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와 함께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김 수석대표는 “이번 방중의 목적이 6자회담과 미사일 중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모두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보즈워스 특사와 김 수석대표는 이번 방중에서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진전 문제, 동북아 정세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김 대표는 이날 오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고 4일에는 양제츠 외교부장을 접견하게 될 것이라고 일정을 소개함. 보즈워스 대북특사는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면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 한편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고려항공 정기운항 일인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아 기대가 모아졌던 북미 회동은 사실상 무산됨.
- 학자 출신인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방중에서 중국 외교당국과의 협의 외에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6자회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보즈워스 특사와 성김 수석대표는 5일 베이징을 떠나 일본 도쿄를 거쳐 7일 한국을 방문해 10일까지 머물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

### ● 러’ 6자수석 내주 방한, 한.미.러 북핵 협의(3/3)

- 외교 소식통은 3일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12일 서울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정책협의회의를



갖기 위해 한국에 온다”면서 “이를 계기로 방한 중인 보즈워스 특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애초 11~13일 방한할 예정이었던 보로다브킨 차관은 10일 서울서 귀국하는 보즈워스 특사를 만나기 위해 한국 도착 날짜를 며칠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즈워스 특사가 3~5일과 5~7일 각각 중국 베이징(北京)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북핵 관련 고위 관계자를 만난뒤 7~10일 방한하며 이 기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러시아 고위 관계자와도 회동한다고 밝혔었음.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의 어떤 고위 관계자와 회동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9~12일 서울에서는 한·미·러 3국 북핵 담당 고위 관료들의 연쇄 회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 ● 北매체 “미국서 ‘北 핵보유국’ 인정” 주장(3/3)

-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3일 미국과 영국의 “출판보도물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미 행정부가 조선의 핵무장 해제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해야 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
- 이들 북한 매체는 미국의 AP통신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미 행정부내에서 우리나라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소개”하면서 “얼마전 미 국가정보국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전쟁목적이 아니라 전쟁억제 수단’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고 주장.
- 또 로이터 통신을 인용,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또다시 규정”하고 특히 “조선을 중국, 러시아와 나란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다”고 주장. 미 정부는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 들어 정보 및 국방 관련 기관들과 인물들이 연이어 조선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매체들은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공동 기고한 ‘평화를 먼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조선과의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조선에 핵무장 해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함.

### ● 러 외무 “北 로켓발사 움직임 주시”(3/3)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



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 준수를 촉구함.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은 별개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함.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준수를 기대한다”고 강조.

- 그는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6자회담을 되도록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담 참가국들이 “양자회담에 중요한 이슈를(6자회담의) 의무이행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 日 “北 위성 발사도 유엔결의 위반”(3/2)

-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안보리 제재의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밝힘. 아소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 “지난번 발사 때 (제재를) 한 경위가 있어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나가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이 전날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밝힌 바 있음. 일본 정부가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나. 미·북 관계

#### ● ‘북한자유주간’ 내달 26일 워싱턴서 개최(3/8)

-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의 워싱턴D.C.에서 열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디펜스포럼의 수전 솔터 대표는 7일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새 의회 출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핵문제로 인해 뒷전에 밀린 북한 인권 등을 감안해 올해 행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주최측은 내달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5월 2일에는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이슈화할 계획.
- 주최측은 또 북한 정치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영화제인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됐던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Kimjongilia)’의 상영도 추진중임.

### ● 미국무부 “北, 민항기 위협 용납안돼”(3/7)

- 미국 국무부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6일 북한이 동해상을 통과하는 한국 국적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국제 민간항공과 전 세계적인 상업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인 레토릭은 보다 더 건설적인 개입정책을 펴려는 목표에 비추어 부당하고 비생산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두기드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미국적 민항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9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군사연습기간 동해상을 통과하는 한국 민항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한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음.

### ● 보즈워스 “이번 순방때 방북 안해”(3/6)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자신의 이번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인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 순방에서 방북할 계획은 없다”면서 “아마도 어떤 시점에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공교롭게도 이 직책을 맡기 전에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이끌고 북한을 간 적이 있다”며 “따라서 4주전에 북한에 갔던 만큼 이번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 “현재 워싱턴 (국무부)에서는 (대북) 정책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일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서둘렀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만약에 북한이 자제하지 않아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 “북한 문제 핵심은 식량난”<WP>(3/6)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이면의 중심에는 식량난이 자리잡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



판이 6일 주장했음. 보수 성향의 이 신문은 김정일 정권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동시에 외국을 향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외부에 손을 벌리면서도 핵으로 무장한 채 미사일을 휘두르는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북한을 혹평하기도 했음.

- 신문은 북한 문제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특히 복잡한 도전이라며 ‘먹는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북한 주민의 발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음. 신문은 이어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지체로 북한의 징집 대상자 4분의 1이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의 지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대외개방을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자력갱생을 위해 힘썼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투쟁하고 있다고도 했음. 신문은 또 지난해 발표된 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은 섭취 영양분의 절반 이상을 시장에서 얻고 가계 소득의 80%가 시장 거래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구의 37%가 여전히 외부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 ● 유엔사, 北에 ‘민항기위협’ 철회요구(3/6)

-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16차 장성급 회담을 개최. 유엔사 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동해상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부 관련부처와 유엔사는 북측의 이번 선언이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철회토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김태영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조평통의 성명 직후 전화통화를 하고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철회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2일 열린 제15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키 리졸브 연합연습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 유엔사측의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유엔사가 제의하고 북측이 수용해 열린 이날 장성급회담에는 유엔사측에서 조니 와이더 미국 공군소장, 이창현 공군준장, 매튜 오해런 영국군 준장, 해럴드 각번 뉴질랜드 대령 등이, 북한 측에서는 곽철희 소장(한국의 준장급) 등 4명이 참석했음.

### ● “한미훈련 北 영공 통과 불필요” <펜타곤> (3/6)

- 미 국방부(펜타곤)는 5일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



한국이나 미국의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과 유엔의 장성급 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기간에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지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한국이나 미국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 어떤 훈련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함. 그는 “이번 달 말 한국과 주한미군이 키 리졸브 연례 훈련을 하기로 돼 있다”며 이번 훈련이 연례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훈련임을 지적함.

### ● “北 대남위협 전혀 도움안돼” <미국무부>(3/6)

- 미국 국무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을 지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위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힘. 국무부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위협을 중단하고 대신 핵폐기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위협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 北-유엔사, 판문점서 영관급 접촉(3/5)

-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5일 판문점에서 영관급 회의를 열어 제16차 장성급회담을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유엔사가 발표함.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유엔사와 북측간 영관급회담을 열어 6일 오전 판문점에서 제16차 장성급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장성급회담 의제와 행정적인 의전 절차를 조율했다”고 밝힘.
- 유엔사는 앞서 지난 2일 제15차 회담에서 북측에 회담을 제안했고 북측이 이 제안을 수용해 회담이 성사됨. 북측은 이날 영관급 회담에서도 이달 9~20일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며 6일 열리는 장성급회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사는 “장성급회담의 목적은 실질적인 정전협정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고 장성급 논의결과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 장성급회담에는 유엔사 측에서 조니 와이더 미국 공군소장, 이창현 공군준장, 매튜 오해런 영국군 준장, 해롤드 각번 뉴질랜드 대령 등이, 북한 측에서는 곽철희 소장(한국의 준장급) 등 4명이 참석.

### ● 美하원, 대북예산 집행요건 강화(3/4)

- 미국 하원은 대북 에너지 관련예산을 증액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합





의사항 이행을 예산집행의 요건으로 명문화함. 미 하원은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2009 회계연도 총괄예산안을 지난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대북한 에너지관련 지원예산은 6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약속을 북한이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장관이 세출위원회에 보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함.

- 이는 하원이 지난해 6월 북한 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무장관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중이라는 사실을 세출위에 보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보다 강화된 것임.
- 하원은 애초 국무부가 요청한 경제지원기금(ESF)내 북한관련 에너지 예산 200만달러에서 25% 증액된 250만달러를 예산으로 배정,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에너지 관련 예산수요에 대비함. 또 하원은 총 9억3천100만달러에 달하는 이주난민 지원예산 가운데 일부를 탈북자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며, 대북한 라디오방송에 필요한 예산 800만달러도 승인함.

#### ● 美바틀렛의원 “北미사일, 단순 시험용”(3/3)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로스코 바틀렛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시험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최근 아이크스켈튼 하원 군사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틀렛 의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많은 미사일들은 “해상에서” 발사될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실제적인 위협”이라며 말함.
- 군사위 산하 공군·지상군소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바틀렛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될 경우 “어디서 발사된 것인지 위성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 영토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해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함.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요격 능력을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의 지난번 미사일 시험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반의 준비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후계구도를 둘러싼 북한 권부내 혼란시 한국과 미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바틀렛 의원은 “혼란 과정에서 북한이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우려하지 않고 과도기를 질서정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은 “위기사 북한의 안정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거듭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지난 2005년 1월 방북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게 됐다”며 “북한은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





듯이 연례적으로 하는 방어훈련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함. 유엔사는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은 32분간 열렸으며 양측은 긴장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을 논의했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차기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유엔사 수석대표인 조니 와이다 공군소장은 “양측 간의 보다 나은 신뢰를 구축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회담을 북측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함. 회담에는 유엔사 측에서 와이다 소장과 이창현 공군준장 등 4명이, 북측은 광철희 소장 등 4명이 각각 참가함.
-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합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2만6천여명이 참가하며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도 동해 상에 전개될 예정임.
- 북한은 유엔사가 키 리졸브 연습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으며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함. 같은 달 28일에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군사 실무책임자가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에서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함.

### ● 헤리티지 “北미사일 33분내 美본토 도달”(3/2)

-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물을 제작. 헤리티지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33분’(부제: 새 미사일 시대의 미국 보호)이라는 영상물의 7분짜리 요약본에서 이란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30~34분 사이에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며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함.
- 7분짜리 홍보 영상에는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헨리 오벌링 전 미사일방어국장,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등이 등장해 적대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고, MD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을 주장. 풀너 이사장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MD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영상물에는 시종일관 긴박한 음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혹 북한군의 미사일 열병식 장면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 영상물에 등장한 인물들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외 강경책을 주도했던 이른바 신보수주의세력(네오콘)의 핵심인 로버트 조지프 전 국무부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

-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사 감행시의 대응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의한 요격 가능성을 내비침. 그는 북한의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발사할) 의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판단할 재료가 없다”고 말함.

#### 라. 기타

##### ● 北기술자들,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 연수(3/6)

- 북한 에너지기술단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하며 풍력 에너지를 비롯해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배운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스위스 비정부기구(NGO)로 북한에 풍력 발전기를 시범설치해준 캠퍼스 뛰어 크리스투스의 부르크하르트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독일의 후춧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대학, 기업체, 풍력 발전소, 전문 기술학교 등을 방문해 유럽의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연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 기술대표단은 이번 연수에서 풍력 에너지 뿐 아니라 태양 에너지, 수력, 바이오가스 등 폭넓은 분야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운다고 그는 덧붙임. 캠퍼스 뛰어 크리스투스는 이미 북한의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했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현재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대를 더 설치 중임.
- 이 단체는 북한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 많아 풍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고 오는 2020년까지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 北 “동해영공 南민항기 안전담보 못해”(3/5)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군사연습기간 우리 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힘.
- 성명은 또 키 리졸브에 대해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



로 별리는”것이라고 지적해, 오바마 새 행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음. 성명은 이번 키 리졸브에 대해 “전쟁연습 기일을 지난해보다 2배나 늘이고, 훈련 내용을 더욱 도발적인 것”으로 바꾸는 등 “이번처럼 도발적이고 위험한 성격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기는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함.

- 성명은 특히 이번 군사연습은 “정치·군사적 대결해소와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북남합의가 전면무효화된 상태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이라며 지금 한반도에는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긴장도를 높임. 이어 성명은 한·미에서 ‘선제 타격’이나 ‘요격론’이 나오는 것을 “상대방(북한)이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현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이 일개의 군사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성명은 또 북한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떤 사소한 도발이나 도발적 징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북측 성명으로 인해 국내외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캄차카 항로(동부 시베리아 항로)는 당분간 이용하기가 어렵게 돼 북태평양 항로 등 ‘우회 항로’ 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서방세계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해 남한을 비롯해 각국 항공사의 미국 및 유럽 노선 일부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고 있음.
- 캄차카 항로는 미주 동부 앵커리지 상단과 캄차카 반도를 지나 북한의 동해 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경로로 이뤄져 있으며 미국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동·중부 지역과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이 이 항로를 이용 중임.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경우 항공기 운항시간은 평균 40여분이 더 소요된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2006년 10월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태평양 항로로 변경해 운항하도록 지시했었음.

### ● 정부 “北, 인권조약상 의무 이행해야”(3/4)

- 정부는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



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해 있음.

- 정부의 이번 입장은 예년과 달리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에 밝혔던 수위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임. 정부는 작년에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 “올해 메드베데프 북한 방문해야”(3/4)

- 러시아가 전 정권에 비해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게오르기 톨로랴야 박사는 3일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주최한 ‘러-북 관계 발전 전망’이란 주제의 원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북한 간 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그는 “그동안 북한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러시아와 냉랭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푸틴 시절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는 양국 지도자들 간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함. 이어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러시아가 수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올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야 하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함께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함.
-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몽골 과장은 “북한은 중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간주하면서 매우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함.
- 비탈리 말킨 상원 의원은 소비에트 시절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북한과 접촉을 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노동력이 풍부하고 핵과 우주 분야에서 강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라면서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 교류와 관광 등도 중요하다.”고 말함.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오는 4~5월 북한의 채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 北 수교국 상주공관, 평양보다 베이징에 많아 (3/2)

-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의 상주공관은 북한 수도 평양보다 오히려 중국의 베이징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설치된 외국의 상주공관은 평양에 설치된 대사관 24개를 포함해 33개이지만 북한대사관과 중국대사관을 겸해 베이징에 설치된 각국의 대사관은 72개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쿠바, 스웨덴, 독일, 영국, 체코, 이란, 시리아 등 24개국에 평양에 상주대사관을 운영 중이며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6개 국제기구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사무소, 청진에 설치된 러시아와 중국의 총영사관을 포함하면 상주공관은 33곳으로 늘어남.
- 그러나 베이징주재 대사관에서 주북한 대사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국가는 태국, 필리핀, 덴마크,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2곳에 달해 북한 주재 공관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서울주재 대사관에서 주북 대사관 업무를 겸임하는 곳은 뉴질랜드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캐나다 등 14국에 이르며 주일대사관에서 주북대사관을 겸임하는 국가도 니카라과 한곳이 있음.

### ● 北, 아랍 국가들과 잇단 교류(3/2)

- 북한 평양의 천리마문화회관에서 2일 쿠웨이트의 국경절(2.25) 48주년과 독립기념 18주년에 즈음해 쿠웨이트의 역사와 문화, 생활 풍습을 소개하는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전시회에는 ‘조선쿠웨이트친선협회’ 위원장인 백용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가함.
- 쿠웨이트는 2001년 북한과 수교한 뒤 이듬해 3월 평양시 상수도 재건 사업에 쿠웨이트기금을 통해 2천17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18일에도 쿠웨이트기금 대표단이 방북하면서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같은 액수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며, 이 차관은 “평양시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평양의 사회기반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 방북중인 후세인 하리디 이집트 외교 차관이 이날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통신은 전함. 지난달 27일 방북한 이집트 외교부 대표단은 이날 박의춘 북한 외무상도 면담.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총 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내일 키리졸브훈련 시작..北도발 가능성(3/8)

-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미군 증원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훈련이 9일 시작됨. 이달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예년 수준인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2만6천여명이 참가함.
-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와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훈련에 투입됨.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작업을 염두에 둔 듯 이지스함 2척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니스호는 선체 길이 317m에 활주로 길이가 332m이며, 각종 안테나 등이 설치된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0여m에 이른다.
- 면적이 1만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음. 이 가운데 EA-6B(프라울러)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방공포대와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AGM-88(HARM)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음. 1995년 취역한 이 항모는 2000년 1월 한국을 처음 방문해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음. 이번 훈련 기간에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oal Eagle)도 실시되며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함.

#### ● “주한미군, 아시아 위협 대응으로 임무전환”(3/6)

- 주한미군이 평택기지 이전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아시아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하도록 임무를 전환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WT)가 5일 보도함. WT는 또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토록 하기 위해 평택기지 이전비용 130억달러(19조 5천억원.1달러 1천500원 적용) 가운데 한국이 90%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WT는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가 오랫동안 작고 외딴 기지였지만 향후 8년 간 한반도 내 104개의 미군기지를 47개소로 통폐합하는 이전사업을 거치면 인근 오산의 미공군기지와 함께 주한미군을 강화하는 허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함. 그러면서 WT는 “평택기지와 오산기지의 미군 임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지금보다) 덜 집중되고, 이(아시아) 지역 다른 곳의 위협에 더 많이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은 점차 한국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평택기지 확장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고위 군무원인 데이비드 프로드삼은 W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임무는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때에 미군의 원정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상주능력과 서비스를 미 육군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함. WT는 특히 평택기지 이전비용 13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90%를 부담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은 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토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함.
-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작년 3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비용이 10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이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증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었음.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평택기지 이전비용이 130억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를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보도가 다시 나오며 따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그동안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급등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11월 정부 관계자들이 용산기지과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한국 측이 5조원(부지매입비 1조원 제외) 가량을 부담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는 언급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 WT는 “이러한 변화가 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의 일환”이라면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1만7천명의 미 해병대 가운데 절반이 태평양 지역 미군 전진기지인 괌으로 이전하고, 괌 지역에 대규모 해·공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싱가포르 내 소규모 미군기지가 더 많이 활용되고, 호주에서의 미군 훈련이 더 많아지며 미군이 인도네시아에 기지확보를 추진중인 점 등을 언급함.
- WT는 또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육군·해군·해병대 및 특수작전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와 더불어 미 육군 2사단 및 예하 전투여단, 헬기부대 등도 한강 이북에서 평택기지로 옮겨오고 미군 정보·공병·병참부대들도 평택기지로 이전할 것이라고 WT는 전함.
- WT는 특히 많은 미군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이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기로 한 2012년 4월께로 예정돼 있다며 한국군에 전시작전권을 넘기면 주한미군은 아시아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함. WT는 또 현재 1년인 주한미군 근무연한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평택기지에는 1만8천명의 미군 뿐만아니라 3만5천명의 가족도 거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 스티븐스 “비핵화는 한미 ‘최고’ 과제”(3/5)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5일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함. 스티븐스



- 대사는 이날 저녁 서울 수송동 통일빌딩에서 열린 희망제작소 주최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에서 ‘한미관계와 오바마 행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정하고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만큼 긴박한 열망은 없다”고 말함.
- 그는 “비핵화는 2주 전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높은 우선 순위의 이슈”라면서 “이는 동시에 7일 방한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주요 어젠다”라고 소개함. 스티븐스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보즈워스 대표는 비핵화의 길이 얼마나 길고 어려운지 알고 있는 분”이라며 “이번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뒤 “그럴 경우 안보리가 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답함.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아직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가능한 분명하고 진지하게 또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 “비록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경험과 역사는 공통의 가치관으로 이어졌다”며 “한·미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동맹에 언급,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 외에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미동맹을 이끄는 새로운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임기 동안 이 축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 한덕수 “한미FTA 美동의 얻도록 노력”(3/4)

- 한덕수 주미대사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국민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고 이해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양국 모두에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물론 경제성장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또 “경제제도의 투명성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력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참여(engagement)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강조함.
- 한 대사는 한·미 FTA비준 전망에 대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국간 발효과정에 있어 다소 노력과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한·미 모두 이 협정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진



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그는 우리의 선 비준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정을 갖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한 대사는 주미대사로서 해야 할 과제로 한·미 전략동맹 강화·발전,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심화, 사회문화적 관계의 새 차원으로 발전 등을 꼽음. 먼저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와 관련, 그는 “한·미간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과제를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공조체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함.
- 한 대사는 경제관계 확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비준과 함께 보호주의 무역 배경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증대 등에 있어 한·미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세기는 다원적, 다층적 네트워크 사회로 안보와 경제 협력만이 아니라 지식, 문화, 예술 등 복합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병행되고 있다”면서 “한·미관계가 더 복합적, 다층적 관계로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오바마, 한미FTA 진전 의회와 협력”(3/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계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3일 밝힘.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들 중요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함.
-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으로선 단순히 미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한·미 FTA에 대한 추가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말함.
- USTR도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벤치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하지만 일각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가 비준되기 위해선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함.

#### ● 美 “한미FTA 등 즉시 책임있게 대처”(3/3)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 비준을 앞두고 있는 FTA들을 둘러싼 문제들을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함.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중이라며 미-파나마 FTA를 상대적으로 빨리 조치해 콜롬비아, 한국과 맺은 FTA의 진전을 위한 벤치마크로 삼겠다고 밝힘.



- 그동안 한미 FTA를 비롯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한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오바마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공개 선언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조기에 가시화될 지 주목됨.
-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467페이지 분량의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20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역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비전을 밝힌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정책우선순위’라는 소제목하에서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합의와 협상을 많이 남겨놓았다”면서 “우리는 이들 합의가 미국과 무역상대국들의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 논의할 것”이라며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의 합의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
- 보고서는 “특히 우리는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처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비롯해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 비준문제를 미루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한미 FTA를 ‘문제점이 많은 FTA’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계류중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의회 심의 및 비준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을 낳았음.
- 보고서는 계류중인 FTA 처리 방안과 관련, “우리는 의회와 협의하는 데 있어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a plan of action)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리는 (콜롬비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파나마 FTA에 대해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함. 보고서는 이어 미-파나마 FTA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는 미-콜롬비아,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로 삼겠다”고 강조, 콜롬비아나 한국과의 FTA에 앞서 제일 먼저 미-파나마 FTA 비준문제를 진척시킬 것임을 강력히 내비침.
- USTR은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가 비준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음. 지금까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본격 심의를 위해선 추가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함.
- 최근 미 상.하원에서 FTA를 심의하는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 비준에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의회의 FTA 심의를 위해 FTA 협정문 및 관련 이행법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완곡히 촉구한 바 있음. 전



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의 순서로 FTA를 체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FTA 체결순서대로 비준처리할 것을 주장했음. 보고서는 이어 캐나다-멕시코 등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무역효과를 뒤집지 않고 개선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미 발효중인 FTA도 수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정책 방향과 관련,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치에 근거한(rules-based) 국제 무역시스템을 고수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국내외에서 경제성장을 되살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증진하도록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무역정책) 토의에서 더 넓은 참여를 증진하는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제시함.
- 한편, 한미FTA와 관련, 보고서는 “2008년에도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해왔다”면서 “한미 FTA는 지난 16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FTA”라고 의미를 부여함. 한미FTA 효과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관세감소 등만으로 연간 100억~120억달러의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연간 약 100억달러의 상품수출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임.

#### ● 한·미 SPI회의..北음직임 대응방향 조율(3/2)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2일 서울에서 제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한·미간 군사현안을 조율함. 특히 이번 회의는 로켓 발사 음직임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등지에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 군 당국 간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함.
- 한미는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사이에 동맹군사협조단(AMCC)과 전구(戰區)급 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신설키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임. 또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위해 7월까지 만들기로 한 공동작전계획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됨. 한미군 기지이전 문제와 관련, 용산기지 2014년, 미2사단 2016년 이전 완료 계획과 이에 따른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특히 한·미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임. 한·미 군 당국은 발사음직임을 보이고 있





## 나. 한·일 관계

### ● 한·일 관광장관회담 5일 일본서 개최(3/4)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일본 도쿄에서 가네코 가즈요시(金子一義) 일본 국토교통상과 회담을 하고 ‘2009 한일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함. 유 장관은 양국간 문화·스포츠·이벤트 및 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의 원동력인 청소년 교류, 국제무대 관광 인재 육성, 각종 관광 정보 제공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유 장관은 같은 날 양국의 여행·항공·호텔·의료 업계가 참여하는 ‘한일 관광 교류의 밤’ 행사에도 참석, 민간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임. 유 장관은 이어 6일에도 오사카에서 양국 간 관광 교류 행사에 참석하는 등 2박3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함.

## 다. 미·중 관계

### ● 양제츠 中 외교부장 내일 방미(3/8)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중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9일부터 13일 까지 미국을 방문. 양 부장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별도로 갖음. 양 부장은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거친 파도를 미국 등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널 것(同舟共濟)’이며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携手共進)’”이라고 말했다.
- 그는 “지금의 국제정세하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동이익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신정부와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후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일부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 “中軍 긍정변화..국제협력 관심”<미국방부>(3/5)

- 미국 국방부는 4일 중국군 지도부가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과 미국 등과의 국가 간 군사교류를 포함해 국제협력에 관심을 표명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데이비드 시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고위급 군사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 이날 의회 미중경제안보 평가 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부적인 안정과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중국군 지도부가 국제적인 구호와 해적 약탈방지, 평화유지 활동, 군사교류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중국군에 긍정적인 변화





가 일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 “중국을 억제하는 게 미국의 관심이 아니다”면서 “중국의 이해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그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함.

- 중국과의 이번 회담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군 당국과 첫 만남. 중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작년에 미국이 대만에 65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0여차례 걸친 군사교류를 취소하거나 중단함.
- 하지만, 시드니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의 세계 최대 군병력 유지와 불투명한 국방비 지출, 대만을 겨냥한 군비증강에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중국의 무기판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또 시드니 부차관보는 “중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란이 접경지대 국가들의 극단주의자들에게 무기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시기에 재래식 무기를 이란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 중국은 지난 4년에 걸쳐 이란과 4억달러에 달하는 무기구매 협정을 체결함.
- 한편, 중국은 올해 7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만 증가 폭은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 “보즈워스, 中과 6자회담 구체 협의”(3/4)

- 미국 국무부는 3일 중국을 방문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중국 측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의를 했다고 밝힘. 고든 두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보즈워스 특사)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의를 했다”고 말함.
- 대북특사로 임명된 뒤 첫 대외활동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 중국에 제일 먼저 도착,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을 만난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방문과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보즈워스 특사는 4일엔 양제츠 외교부장을 면담할 예정임. 이어 보즈워스 특사는 5일 일본로 떠나 일본 측 관계자들과 만난 뒤 7일부터 서울을 방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과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의. 보즈워스 특사는 서울에서 방한중인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도 만날 계획임.



## 라. 미·일 관계

### ● “美, 센카쿠 열도에 안보조약 적용”(3/5)

-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도록 한 미일 안보조약이 중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도 적용된다고 미국측이 확인했다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이 5일 밝힘.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반환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진 이래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고,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미국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함. 이는 빌 클린턴 정권 당시인 1996년과 조지 부시 정권 당시인 2004년에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밝힌 것과 같은 내용임.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국 해양조사선이 센카쿠 열도 근해의 영해를 침범한 이후 일본측이 미국측에 이를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측은 그동안 명확한 언급을 피해옴.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권 하(의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음.

## 마. 미·러 관계

### ● 러’ 이란핵-MD교환 美제의설 부인(3/3)

-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협조하면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일명 ‘이란핵-MD 교환설’을 제안해 왔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함.
- 나탈리아 티마코바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오바마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같은 교환을 제안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힘. 그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신에 담긴 긍정적 기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서한에는 다양한 제안과 평가가 들어 있었지만 뭘 주고받지는 제안은 없었다”고 강조. 러시아와 미국 언론은 2일 오바마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동유럽 MD 계획을 철회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함.

### ● 아프간行 비군사 물자, 러시아 통과(3/3)

-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공급될 비군사 물자가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를 통과함. 3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중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라트비아를 떠난 수송 열차가 러시아 영토를 통과, 아프간으로 향했다”고 밝힘.
- 아프간 내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미국과 나토는 파키스탄을 통



- 한 수송로가 탈레반 세력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놓임에 따라 대체 수송로를 모색해 왔음. 지난해 러시아와 나토는 아프간 주둔 병력을 위한 비군사 물자 수송에 합의했음. 건설 자재와 의약품, 음료 등을 실은 수송 열차는 오는 6일께 러시아를 땅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아프간으로 들어갈 예정임.
- 한 외교 소식통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이번 수송 물자 통과는 미국과 러시아 간 아프간 협력의 첫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함. 한편 스페인을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함.

## 바. 중·일 관계

### ● 주일 中대사 “北 발사 예방외교가 중요”(3/5)

- 중국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주일대사는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지 않도록 서둘러 예방외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함.
- 추이 대사는 전날 가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엇을 발사할 지, 발사때까지 알 수 없음. 한반도는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발사하지 않도록 촉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함. 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2006년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결의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국제사회가 반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석이 제각각이다”며 인공위성 발사라도 결의 위반이라는 한미일 3국의 입장에 동조하지않고 있음을 시사함.
- 그는 중일 양국의 현안인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과 관련한 조약 체결 협상이 시작되지않고 있는데 대해 “바다의 권익 다툼은 국민 감정에 관계되는 문제로, 자국민을 납득시키는 동시에 상대국도 배려하지않으면 안된다”며 시일이 걸릴 것임을 내비침.

### ● “中, 日에 오키나와영사관 타진…거부당해”(3/3)

- 중국 정부가 지난해말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싶다고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함.
- 일본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오키나와에는 주일미군이 집중된 만큼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월 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 영사관을 개설했으며 중국측은 칭다오 영사관 개설 준비 과정에서 오키나와, 니가타(新潟)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
- 오키나와는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상 중요한 거점이



며 중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가까움.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오키나와 총영사관을 설치해서 중국군이나 정보기관 관계자가 상주하면 미군이나 센카쿠 열도를 감시하는 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신문은 전함.

## 사. 기타

### ● 막강해진 화교 정치세력…9개국 고위직 22명 (3/6)

- 전 세계에 진출한 화교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데 이어 정치권에 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캐나다의 화교 포털 사이트인 ‘글로벌 차이니스 프레스(GCP.www.gcpnews.com)’에 따르면 약 5천만명에 이르는 전 세계 화교중에서 총리,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른 인사는 6일 현재 9개국에서 22명으로 집계됨. 미국에선 조만간 화교 출신 장관이 3명째 나올 전망이고 캐나다에선 화교 출신 총독이 탄생했으며 태국에선 두명의 총리가 화교의 후예로 알려져 있음.
- 국별로 보면 미국이 10명으로 가장 많음. 대표적인 인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공식인 상무장관에 지명한 중국계 개리 라크 전 워싱턴 주지사(59·중국명 駱家揮)임. 라크 지명자가 상원에서 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60·중국명 주디원<朱捷文>) 에너지장관에 이어 두번째 중국계 장관이 됨. 중국계 인사가 미국의 각료로 선임된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일레인 차오(趙小蘭) 노동 장관을 포함하면 3명으로 늘어나게 됨. 오바마 정부에서 각료 이외에도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의 하버드대학 동기인 크리스 루(42·중국명 盧沛寧) 내각담당비서와 변호사 출신으로 공공연락실장인 크리스티나 천(陳遠美)이 포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음.
- 또 민주당의 데이비드 우(吳振偉) 하원의원은 5선 의원으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반 풍(萬富宇)은 정보기관인 국토안전부의 수석법률고문임. 미 월넷시 시장 선거에서 지난 2월 11일 쑤왕수(蘇王秀)가 당선, 첫 화교 출신 여시장의 기록을 세웠음.
- 캐나다에서도 화교의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짐. 조부가 광둥(廣東)성 출신으로 홍콩에서 태어난 우빙즈(伍冰枝)는 지난 199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위임을 받고 캐나다 총독직에 올라 6년간 자리를 지킴. 백인이 아닌 인종으로는 최초의 캐나다 총독이고 여성으로는 두번째이며, 정치나 군사적 배경없는 인사로는 최초 등의 기록이 잇따름. 주샤오쑤(朱小蓀) 캐나다 오타와 경찰국장,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의원 황천샤오핑(黃陳小萍)도 캐나다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태국에선 아피시트 웨차치(阿披實) 총리와 총리를 지낸 사막 순다라벳(72·李沙馬) ‘국민의 힘’당(PPP) 총재가 모두 화교의 후예로 알려



집. 또 호주에서도 노동장관에 임명된 황잉셴(黃英賢), 최초의 오번 시 여시장 린리화(臨麗華)가 화교의 정계 진출을 리드함. 이밖에 뉴질랜드 여당의원 황쉬위팡(黃徐毓芳), 인도네시아 무역장관 평후이란(憑慧蘭), 북아일랜드의 지방의원 루만화(盧曼華), 브라질 사오파울루시 의원 웨이렌우(威廉巫), 일본 민주당 의원 렌팡(蓮舫) 등이 모두 화교 출신임.

### ● ‘중국의 입’ 류젠차오, 필리핀대사 부임(3/6)

- 중국 최연소·최장수 대변인을 맡아온 류젠차오(劉建超·44) 전 외교부 대변인실장이 6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로 정식 부임. 류 대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대사 부임 사실을 밝히면서 “중국과 필리핀의 우호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함.
- 1964년 2월 지린성(吉林)성에서 태어난 류 대사는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외교부 통역실 등을 거쳐 1995년 주 북아일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함. 그는 2002년 6월 38살 때 중국 사상 최연소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지난 1월까지 거의 7년 가까이 대변인으로 근무해 중국 외교부 사상 최장수 대변인으로 꼽힘.
- 류 대사는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영토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함.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난사(南沙)군도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 베트남, 대만,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그는 “난하이(南海) 해역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라며 “임기중에 군사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겠다”고 말함. 이에 앞서 필리핀 국회는 지난달 17일 중국의 황옌다오(黃岩島)와 남사군도 일부 섬들을 자국 영토로 규정한 ‘영해기선법안’을 통과시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음.

### ● “亞 국방예산 7년내 여타 지역 능가” (3/5)

- 아시아 지역의 국방예산이 앞으로 7년내로 전세계 다른 모든 지역들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의 국방연구 책임자인 라탄 쉬리바스타바는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자사 회의에서 오는 2016년께 아시아 지역의 국방예산은 전세계의 32%인 4천800억달러로 2007년에 비해 24%나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봄. 쉬리바스타바는 아시아 지역의 국방예산 급증은 중국과 인도가 견인할 것이라며 중국의 국방예산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2007년 1천20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2천55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함. 또 인도는 향후 5년에 걸쳐 국방예산으로 약 1천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07년 전세계 국방예산의 3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던 북미지역 국방예산은 7년 후에는 29%인 4천350억달러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는 “국방예산의 초점이 북미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 국가도 국방예산 수백만달러를 아끼려고 자국 안보 위협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은 최근 수년동안 국방예산을 늘려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아옴. 중국 정부는 이날 개막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은 15.3% 늘어난 4천729억위안(미화 69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방예산 증가가 전세계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힘.

### ● 한-호주, 안보협력 공동성명 채택(3/5)

- 한국과 호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 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함.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음.
- 양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의견을 같이함.
- 또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우리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사실상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PSI와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함. 특히 양 정상은 한·호주 FTA 체결을 위한 첫 회담을 5월중 개최기로 하는 등 FTA 체결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함. 러드 총리는 우리의 K9 자주포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며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호주도 참여하겠다고 밝힘.
-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국제체제 구축에 공조키로 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확대, 호주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한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도 합의했음. 이 대통령은 호주의 신규 LNG 프로젝트와 고속철 도입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한국이 금융안정포럼(FSF) 회



원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함.

● <미국인 “美 최고동맹국은 영국”>(3/5)

- 미국인들은 영국을 미국의 최고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음.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2월 27-28일 이틀간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1천23명(신뢰도 95±3%)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갤럽이 밝힘.
- 이번 조사에서 갤럽은 지난 2월 9-12일 실시했던 국가별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캐나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등 5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설문대상자들에게 물었음. 당시 국가별 선호도 조사에선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영국을 미국의 최고 동맹국으로 꼽았고, 캐나다 29%, 일본 12%, 이스라엘 10%, 독일 5% 등이었음.

● 日 민간경제 대표단 이라크 방문(3/2)

- 일본의 민간경제 대표단이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 석유자원 등 이라크 부흥을 위한 다방면에 걸친 투자 문제에 대해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NHK방송이 2일 보도함.
-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한 대표단은 석유, 건설, 상사 등 일본의 주요 기업 12개사의 간부들로,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 등 이라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고 방송은 전함. 일본의 본격적인 민간 경제 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하기는 6년 전 이라크 전 개전 이후 처음.

● “中, 보유외환으로 원유비축 검토”<日紙>(3/4)

- 중국 정부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원유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함. 중국은 미국 국채 등 달러자산을 중심으로 외화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미 정부가 경기대책 재원으로 국채를 대량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가격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운용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원유를 구입하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외화보유액을 이용해 원유를 구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외화보유액 운용에서 미국에 대한 협조를 중시하고 있으나 원유 구입에 나설 경우 미국채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원유의 국가비축을 시작, 오는 2010년까지 제1기분으로 약 1억배럴의 비축을 완료한다는 계



확임. 현재는 재정자금을 이용해 비축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화보유액을 활용한 비축의 확대가 검토 항목에 오르고 있다는 것임. 또한 원유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유전개발비로 외화보유액을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원유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비축체제의 정비를 서둘러 있음. 중국은 지난해 약 절반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오는 2020년에는 수입 의존도가 6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비축기지가 4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8곳을 신설할 계획이어서 기업의 비축량을 포함할 경우 장차 현행의 5배로 늘어나게 됨.

- 신문은 원유 구입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내년까지의 비축량 1억배럴을 모두 보유외화로 구입할 경우 현재의 유가로는 46억달러 정도로, 중국이 보유한 외화의 약 0.2%에 달하게 된다고 추산됨.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지난해 말 현재 1조9천500억달러로 일본(1조300억달러)의 거의 두배에 달함. 중국의 외화보유액의 3분의 2가 달러자산으로, 미국채의 보유잔고는 작년 9월말 현재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음.

#### ● **李대통령, 호주 도착..‘녹색협력’ 논의(3/4)**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남태평양 3개국 국민 방문의 두번째 목적지인 호주 시드니에 도착, 이틀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시작함. 이날 오전 킹스포드스미스 국제공항을 통해 시드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호주 그린비즈니스포럼에 참석, ‘한-호주 녹색협력 강화’를 주제로 오찬 연설을 한 뒤 호주의 대표적 금융사인 맥쿼리그룹의 니컬러스 무어 회장을 접견함.
- 이어 이 대통령은 마리 바쉬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총독과 환담하고,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내에 위치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시찰. 이 대통령은 또 호주 야당인 자유당의 맬컴 턴볼 당수를 접견하는 데 이어 동포 간담회, 네이션 리스 NSW주 총리 초청 만찬 등에 차례로 참석하는 것으로 시드니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 이 대통령은 오는 5일에는 호주 수도 캔버라로 이동, 케빈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국제금융위기 공조 등의 추진 방안을 협의한 뒤 6일 오전 세번째 순방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함.

#### ● **정부, 가자 재건에 1천500만달러 지원(3/3)**

- 정부는 향후 2년간 팔레스타인에 1천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힘. 외교부에 따르면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재건 국제회의’에서 중동평화 정착과 팔레스타인 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





지를 표명하고 2009~2010년 신규지원 2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1천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세계 72개국과 유엔을 비롯한 12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이번 가자 재건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앞으로 총 5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알려짐.

### ●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3/3)

- 한국과 뉴질랜드는 3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FTA 협정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타결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 양 정상은 또 외교장관 연례회담을 계속하고 의회 교류를 포함한 각료급·고위급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청정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농업 개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아울러 ▲영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한-뉴질랜드 교육부 간 교육협력 약정 체결을 환영하며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응용기술 관련 협력을 증진하고 ▲나노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협력약정에 따른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관광 진흥과 양국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 존 키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함.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각종 아시아 지역 협의체와 유엔 및 다자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포함해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적극 해나가기로 함.
-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 오클랜드 전동차 및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아난드 사티아난드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을 갖고 교육분야 협력과 함께 한국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사티아난드 총독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李대통령, 3개국 순방 출국(3/2)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함. 이번 순방은 뉴질랜드(3-4일), 호주(4-6일), 인도네시아(6-8일)에서 각각 이틀, 사흘씩 머무는 등 총 6박7일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신(新) 아시아 구상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국, 일본에 치중됐던 아시아 외교를 전(全)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문화, 에너지, 그린성장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짐.

- 이 대통령은 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존 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확대,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한 뒤 5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호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국제금융위기 공조 등을 추진.
- 6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인도네시아내 20만ha 조림지 추가 확보, 동광·유전을 비롯한 주요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방안 등을 논의.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방문때 신아시아 구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짐.

#### ● 李대통령-노르웨이총리, 수교50년 축하서한(3/2)

- 외교통상부는 2일 한국-노르웨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지난 50년간 양국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상호보완적인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의 발전을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총리도 서한을 통해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조선·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IT·에너지·환경기술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자 및 다자 현안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르웨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올 한 해 동안 고위 인사 상호 방문을 비롯해 서울과 오슬로에서 각각 음악회, 미술전,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

#### ● 中 “가자지구 재건 지원에 동참”(3/2)

- 중국은 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복구 사업과 중동 평화협정 과정에 참여할 태세가 돼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힘. 쑤비간(孫必干) 중국 중동특사는 이날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가자지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쑤비간 특사는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서 2일 개막한 가자지구 지원 국제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가. 쑤 특사는 중국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의 평화와 팔레스타인 내부 단결을 위한 압바스 수반의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말함.
- 압바스 수반은 중국이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원해 준 사실을 잊



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이 이번 가자지구 지원을 위한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 중국은 그러나 가자지구 재건에 대한 지원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모두 16억5천만달러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미국도 가자지구 재건에 3억달러를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짐.

### ● 李대통령, 순방중 ‘新아시아 구상’ 선언(3/2)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신(新) 아시아 구상을 밝힐 것으로 2일 알려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동북아 국가에 치중됐던 아시아 외교 지평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등으로 넓히고 경제에 중점을 뒀던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 같이 밝힘.
- 신아시아 구상은 아시아 권내에서 중국, 일본에 치중됐던 그동안의 관계를 전(全)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문화, 에너지, 그린성장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임. 또 이번 신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시아권 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을 주도국으로 격상,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계기를 잡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음.
- 이 대변인은 “올 상반기 중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6월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순방은 신아시아 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때 신 아시아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함.

### ● 美-EU 내달 5일 프라하서 정상회담(3/2)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5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대면함. EU 이사회 순번의장국 체코의 미렉 토폴라넥 총리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방문 초청을 수락했음을 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함. 토폴라넥 총리는 “그 시기는 4월 5일이 될 것”이라며 “이 때 프라하에서 EU 정상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프라하 방문에 앞서 내달 3~4일 프랑스-독일 접경 도시인 스트라스부르(프랑스)와 켈(독일)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나토 정상회의 직후 프라하로 이동, EU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 EU 회원국 정상들과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前)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등의 이슈를



놓고 빼먹었던 대서양 양안관계 복원 및 EU 회원국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관타나모수용소 구금자 분산 수용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이튿날인 6일 토폴라벡 총리,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 하비에르 솔라나 외교정책 대표 등 EU ‘트로이카’와 회동함.

● “유럽기업들, 원가낮추려 대북투자 관심 증대”(3/4)

- 유럽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사업과 투자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제품 원가 절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럽 기업들의 대북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큰 특수를 맞을 전망이라고 네덜란드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가 주장.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의 북한 방문을 조직해온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치아 대표는 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 기업들은 특히 값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의류와 농산물 산업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함. 그는 휴대전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도 유럽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방북한 유럽 사업단이 이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힘.
- GPI컨설턴시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특히 북한 관리들도 참석해 북한 상법과 규제, 경제상황 등을 설명한다고 RFA는 전함. 치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진 유럽 기업들을 조직, 5월9일-16일 방북할 예정임.



### [참고 1] <신아시아 외교구상 주요 내용> (연합뉴스, 3/8)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신(新) 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만큼 외교의 초점을 아시아권으로 돌리는 ‘귀(歸) 아시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주도국으로 우리의 입지를 확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정부 측이 밝힌 신 아시아 외교의 추진 방안.

#### ◇신아시아 외교 추진 배경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

- 주변 4국 외교 마무리, G20 의장국 수임, 중국·일본과의 협력 진전 등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이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주장, 금융위기에 대한 신흥국 입장 대변 등으로 아시아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
- 중국·일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 등으로 한국이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 마련 가능

▲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 힘의 중심은 ‘서(西)’에서 ‘동(東)’으로,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 서구 민주주의 경험 등에 비춰 아시아는 우리 외교 역량 발휘가 용이한 지역
- 아시아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new frontier)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외교 수단 마련의 필요성 대두

-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like-minded group)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경향
- 우리는 이미 G-20, G8+, 기후변화, 유엔개혁 등에서 인도네시아·호주 등 아시아 중견국가들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우리의 적극적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증진 외교 추진 필요성 증대

-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프트 파워가 개별국가 국력 측정의 핵심적 척도로서 연성국력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과 역량강화는 글로벌 코리아



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정 목표와 부합

- 실제 금융위기 대처,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인니, 호주 등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중

▲선·후진국간 가교역할 수행이 가능한 우리의 위치 활용

- 개도국에서 빠른시일내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우리의 발전 사례를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 가능
- 식민지 경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등에 비춰 한국은 정서적으로 아시아권 개도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가

◇신 아시아 외교 추진 방향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 이슈 해결 주도

- 아·태지역에서 녹색성장벨트 조성
- 국제금융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리의 협력 대상이 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해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 방위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 강구 필요
- 한국이 아시아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내 모든 나라와 FTA 조속 체결 추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

-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를 적극화
- 어려운 우리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 개도국 유무상 원조(ODA) 및 기술 협력을 적어도 현 수준보다 줄이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여건 호전시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 ODA 등을 통한 협력 추진시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를 갖고 추진

▲주요 이슈별 아시아 국가간 협력 협의체 구성 추진(Asian Caucus)

- 대표적 예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G20에서의 한-호주-인니 협력 추진

◇올해 계획

▲정상외교 활성화

- 동북아지역 :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올 하반기)을 중국에서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협력 계속 강화, 일본·중국과 양자 및 다자계기 정상간 협의 긴밀화
- 아세안 : 태국 개최 아세안+3 / EAS 정상회의 참석(4월 중순), 한-아



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6.1-2, 제주도), 아세안+3 정상회의(10월), APEC 개최 및 ASEAN 인근국가 순방(11월)

- 중앙아 및 남태평양 : 올 상반기 중 중앙아 3국 방문 예정, 내년에는 중앙아 5개국 정상을 초청, 한국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

▲ 방한 초청 외교 강화

- 아시아 각국 정상에 대한 방한 초청외교 활성화

◇주요 협력 프로젝트

▲우리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2억 불 펀드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세계경제동아시아포럼(WEF, 6.18-19 서울)을 통해 금융위기, 기후 변화 등 아시아내 논의 주도
-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확대 합의 이행,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 가속화, 아시아 개발은행(ADB) 자본금 확대 등 추진
- 우리가 설립하는 한.ASEAN 센터를 적극 활용,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Hub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시아 주요 국과 FTA 체결 추진

◇이슈별 아시안 코커스(Asian Caucus) 구성 검토

▲아시아 국가간 like-minded group들과의 연대·협력 주도

- 기후변화, 금융위기, 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아시아국가들 중 중점 협력국 구성 추진 검토

▲APEC 등 다자회의 계기로 like-minded group 정상회의 개최 검토

hjw@yna.co.kr, huma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08/0503000000AKR2009030800220001.HTML>



[참고 2] 〈中 외교부장 기자회견 주요내용〉 (연합뉴스, 3/7)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다음은 양 부장이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이다.

◇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 = 우리는 북한이 통신위성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 반응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사태의 추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관 당사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들을 많이하기를 희망한다.

◇ 6자회담 = 우리는 오바마 신정부가 북핵 6자회담을 매우 중시하고 회담의 진전을 위해 기타 당사국들과 공동 노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힌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6자회담은 이미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기에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 최근 약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해 회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2005년 9월 19일의 공동성명에 근거해 같은 방향을 보고 제2단계 행동을 마무리하고 회담을 제3단계로 진전시켜나가기에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진전을 위해 특별하고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한·중 FTA =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산관학 공동연구 시스템을 건립했다. 적극적으로 이같은 연구와 토론을 추진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협상을 시작해 자유무역지역을 건설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한·중 양국에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의미가 있다. 양국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투자 및 무역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일간의 작년 무역은 2천억달러를 넘었고 한중간에는 2천억달러에 근접했다.

우리는 서로 시장을 더욱 개척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양국 국민과 아시아인들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 한·중·일간 무역액은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의 무역액을 넘어섰다. 3국이 협력해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주최국으로서 중국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 ◇ 중·미 관계 = 오바마 신정부 출범 이후 중미 관계는 매우 양호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로 좋은 대화를 나눴고 양국관계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인식에 도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중했을 때도 중·미 양국은 중미관계의 발전을 바란다는 진실한 희망을 피력했다.

중국은 양국이 서로의 중요한 이익을 존중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공동노력으로 양국관계가 지속적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프랑스, 티베트 문제 = 중국 정부는 원명원 문화재를 경매하는데 반대해 왔다. 그것은 중국이 빼앗긴 문화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문화재를 가져올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의 설상가상과도 같은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 국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곳에 ‘대티베트 독립지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중국 군대를 내쫓고 티베트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중국인도 내쫓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무슨 종교인사인가?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자국 영토의 4분의 1을 분열시킨다면 좋아하겠는가. 달라이 라마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적 망명자이다. 이 문제는 종교, 인권, 민족,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통일을 반대하는 문제다. 어떻게 이것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 세계 각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다룰 때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하거나 각국 영토가 달라이 라마의 분리주의 기도에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통합적인 기준이다.

- ◇ 중·일 관계 = 동중국해 문제에서 양국이 지난해 달성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공동인식의 정신을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텐와이텐(天外天) 유전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돼 있는 중국 영해로서 공동협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염만두 파문과 관련, 중국은 식품안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현재 양국에서 식품당국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품 안전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장기적인 메커니즘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 국제금융위기는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문제며 이런 관점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회담이 신뢰를 증진하고 거시경제 조정을 강화하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시스템과 관리체계에 필요한 개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과 개최국인 영국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 금융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

◇ 다르푸르 사태 및 아프리카 관계 =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정치 외교적 대화로 이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국가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돈과 석유만을 밝히는 국가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없는 나라도 많다. 중국은 그런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이 평가한다.

◇ 올해 외교의 목표 = 지난해 중국 외교는 난관을 뚫고 개척함으로써 풍성한 결과를 얻었다. 지진 등 난관을 극복하고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180여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등 외빈들이 중국을 방문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목표는 국내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또 주권과 영토, 중국인을 보호하는 안전외교와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js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07/0503000000AKR20090307053800083.HTML>



[참고 3] <한뉴질랜드 정상 공동회견 주요내용> (연합뉴스, 3/3)

(오클랜드=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인해 조금 주춤할 지 모르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여러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키 총리도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키 총리의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모두발언

- ▲키 총리 =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경제금융위기에서 양국은 보호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개방경제 체제에서 세계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이 대통령 = 한국 국민들에게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뉴질랜드를 많이 꼽는다. 저도 그 중 한사람으로서 뉴질랜드를 오고 싶어 했고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이곳을 찾았다.

오늘 회담에서 한국의 농업개혁에 뉴질랜드가 좋은 모델이라는 인식하에 양국이 이 부분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문일답

- (이 대통령에게)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확산 저지와 관련해 다른 참가국 정상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
- ▲지난번 페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모든 참가국 정상들이 보호무역주의 반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국가에서 보호주의 성향의 조짐이 보여 이번 G20 회의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측에 이와 관련해 개별 국가에게 지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이 대통령에게) FTA에 대한 국내 반발을 설득할 논리는 어떤 것인가.
- ▲원칙적으로 우리가 세계화된 이상 서로가 개방해야 하고, 특히 한국같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개방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로) 상충되는 것보다 보완적인 게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해 나가면 된다.
- (키 총리에게) 양국간 녹색협력의 구체적 방안은.



▲국제적 대응이 효과적이려면 인도, 중국 등 탄소배출량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녹색 기술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고, 기술을 개발해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 (키 총리에게) 양국 브로드밴드 협력방안에 대해.

▲뉴질랜드가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한다.

hjw@yna.co.kr, huma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03/0503000000AKR2009030313940001.HTML>



#### [참고 4] <한호주 안보협력강화 공동성명 요지> (연합뉴스, 3/5)

(캔버라=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호주를 국민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총 9개항의 성명에서 북핵문제 조기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등 국제무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조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주요 내용.

1. 아·태지역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공통의 전략적 이해 사안을 논의하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각료급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2. 불법 마약과 마약 원료의 유통, 밀입국 및 인신매매, 돈세탁, 화폐위조 및 무기 밀거래, 해적 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 활동 및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긴밀해 협력한다.
3.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에 대해, 그리고 '국제 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진전을 위해 양자 차원과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 협의하고 협력한다.
4. 유엔과 유엔 관련기구 및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를 포함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 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5. 평화유지, 민·군 협력, 국방경영, 합동 연습·훈련·교류 프로그램 및 호주 '아·태 민군 최고센터'와 한국 관계기관간 연계수립 등 분야에서의 국방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양국 국방당국간 기존의 전략대화 및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간다.
6. 국방기관 및 관련 방산업체들 간에 비밀군사정보의 안전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의 기회를 더욱 촉진한다.
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모색, 정보공유를 통한 향후 협력증진 방안의 개발지원 및 여타 방위산업, 물자조달·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협력가능성 모색을 통해 대한민국과 호주 방위산업간의 협력을 대폭 증진한다.
8.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촉진과 원조효과 개선을 포함하는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협력을 증진한다.



9. 재난과 긴급상황 대비, 대응 및 관리에 관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

hjw@yna.co.kr, huma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04/0503000000AKR20090304228700001.HTML>

북한연구실 제공